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한스-게오르크 벨링(Hans-Georg Wehling)

1. 강압 금지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이 받아들일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의 '자립적인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교육과 교조화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의식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일치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숙이라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목표 설정과도 일치할 수 없다.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또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는 위에서 언급한 요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이 무시되고 선택 가능성이 폐기되고 대안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조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심지어 교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들(과 정치교육 행사 참가자들)에게 그들 각각의 고유한 정치 사회적 출신 배경으로 인해 낮은 입장과 대안을 특별히 부각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왜 교사의 사적 입장과 학문적 배경과 정치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명해진다. 이미 언급한 예를 다시 고집어 올린다면, 교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교사의 이해에 대립하는 다른 견해들도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3. 학생은 정치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이익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면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을 찾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그런 목표 설정은 작용 능력을 매우 강조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두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다. 이 맥락과 관련해 때때로 - 이를테면, 헤르만 기에제케(Herman Giesecke)와 로프 슈미더러(Rolf Schmiederer)에 반대하며- 제기되는 비난, 즉 교사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형식성예로의 회귀'라는 비난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합의 도출이 아니라 최소 합의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출전: Siegfried Schiele/Herbert Schneider (ed),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정치교육의 합의 문제), Stuttgart 1977, 179-180쪽.